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23.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안번호 1008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박순규 의원 외 109명
- 나. 제안일 : 2019. 8. 21.
- 다. 회부일 : 2019. 8.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 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락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최근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부품 수출제한, 백색국가 제외 등 보복성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행위임.
-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에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됐음.¹⁾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재판관련 세부 추진경과는 별첨1 참조).
-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동 협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1) 이와 관련해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결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및 규탄 대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세부내역은 별첨3 참조).

-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주일 한국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먼저,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함.
- 이어, 8월 2일에는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는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세부 추진경과는 별첨2 참조).
-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등 역사·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일관계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정·경분리 원칙이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對한국 수출규제 등 일련의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보복 조치 등 일련의 경제 침략적 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외교적 해결 촉구 ②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존중과 사과 및 배상 이행 ③ 정부와 서울시 등에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 보호,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는 한일우호관계 훼손과 경제적 악영향은 물론, 자유무역질서 퇴보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 보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1】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1965년 6월 22일	◦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재산 및 청구권협정 체결
1997년 12월 24일	◦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제기
2001년 3월 27일	◦ 오사카 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2002년 11월 19일	◦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3년 10월 9일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2005년 2월 28일	◦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 상대로 소송 제기
2008년 4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2009년 7월 16일	◦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 24일	◦ 대법원, 파기환송 (일본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2013년 7월 10일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에 피해자들 1명당 1억 원씩 배상 판결
2018년 7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혹 수사 (해당 소송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입 정황)
2018년 10월 30일	◦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 배상 최종 확정 판결

【참고2】

일본 정부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관련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8년 10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 최종 확정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피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판결 ◦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2019년 6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한일 기업 출연금 통한 배상 제안 ◦ 일본, 강제징용 관련 3국중재위 설치 요청
2019년 6월 28~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정상회의서 양자회담 무산
2019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한국 수출 물품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반도체 소자 부품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수출 제한 발표 ◦ 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법령 개정안 고시
2019년 8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외교장관 회담
2019년 8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2019년 8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공포
2019년 8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2019년 8월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2019년 8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예정

【참고3】

일본 정부 경제보복 관련 광역 및 기초의회 결의문 채택 및 성명서 발표 등 현황('19.8.21. 기준)

□ 광역의회

구 분	내 용	비 고
부 산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 결의안 채택 예정)	결의대회
대 구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	보도자료
인 천	일본정부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 성명서	보도자료
광 주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이행 촉구 성명서	보도자료
대 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규탄 성명서	보도자료
울 산	'일본 만행에 결연히 맞서겠다!' 성명서	보도자료
세 종	일본정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	결의안 채택
경 기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결의안 채택
강 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결의안 채택
충 북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 촉구 성명서	보도자료
충 남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	보도자료
전 북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 규탄서	보도자료
전 남	일본정부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 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	보도자료
경 북	일본정부 경제 도발에 따른 경북도의회 성명서(※ 결의안 채택 예정)	보도자료
경 남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명분없는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 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력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초의회

연번	구 분	내 용
1	광주 서구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2	전남 화순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3	경기 부천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4	서울 구로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5	전북 임실군	일본정부 수출제한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6	충북 보은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7	서울 중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8	서울 강서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9	전북 순창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10	전남 여수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1	전남 보성군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문
12	전남 해남군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13	충남 태안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14	서울 은평구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15	전남 순천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촉구 성명서
16	서울 강동구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문
17	인천 중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강력 규탄 성명서
18	서울 성북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19	서울 성동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20	충남 공주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21	광주 남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22	전남 담양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23	경기 의왕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촉구 결의문
24	부산 북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25	충남 보령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26	강원 철원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27	서울 관악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28	부산 남구	일본 경제침략 규탄 남구의회 의원 성명서
29	부산 진구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30	강원 삼척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
31	서울 구로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32	충남 아산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33	전남 나주시	일본 아베정권 경제침탈 규탄 결의안